

“하계올림픽 유치, 도정 최우선 과제”

전북자치도, SOC 조기 추진·국가예산 10조원 시대 대비
대선 공약화·조직 개편·지하 안전관리 등 현안도 병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추진과 국가 예산 10조원 시대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선다.

전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도정 브리핑에서 “전주 하계올림픽은 전북의 백년대계로, 유치를 위한 전력과 논리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올림픽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계획된 SOC 사업들이 이 기회를 통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조만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가 예산 부족 단계 대응 △메가 비전 프로젝트 대선 공약 반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현황 △제2 경향학교 설립 부지 선정 등 네 가지 주요 안건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현재 정부 부처별 추경 예산안 제출이 진행 중으로,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사업들이 향후 예산 반영의 관건이 된다”며 “국가예산 10조 시대 실현을 위해 정치권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도시 주도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

도는 전주 김천 간 철도,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 고흥~세종 간 고속도로 등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전 실장은 “이들 교통망은 애초부터 전북이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조기 착수될 수 있다”며 “올림픽이 되면 빨라지고, 안 되면 늦어질 뿐 반드시 전북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초에는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해 해당 SOC 사업들에 대한 광역 차원의 공동 대응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시 반복되는 ‘예산 낭비’ 우려에 대해서도 전북자치도는 난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 실장은 “기존 경기장 활용, 인접 시도와의 분산 개최 등으로 적자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기 후에도 활용 가능한 인프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 모두 존재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을 멈춰선 안 된다”며 “이 기회는 전북에게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41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약 2,5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상정한다.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현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에는 올림픽 유치를 전담할 부서 신설이 포함돼 있으며, 도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전 실장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행정 조직 신설은 시급한 과제로, 도의회 역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이번 회기에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도는 민생 중심의 ‘탐별 벤치마킹 시즌’을 통해 171건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54건이 민생 관련 과제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4월 말까지 행정부지사 주재로 평가를 마친 뒤, 우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지반 침하 사고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한 지하 시설물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목표 대비 45% 완료됐으며, 내년까지 전 시군 100%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북도는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전주기 광역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국가계획 반영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전 실장은 “광역교통협의회 구성, 사업 타당성 분석 등도 함께 추진해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전북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6·3 제21대 대통령선거 “저도 출마합니다”

“부채 탕감으로 서민 살리겠다”

김광중 아리랑당 창당추진위 대표, 대선 출마 선언

김광중 아리랑당 창당추진위 대표가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빈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나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빈부무국(貧富無國), 빈부제국(貧富齊國)으로 만들겠다”며 대선 원주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부채 탕감을 내세웠다.

그는 자영업자, 대학생, 자녀 양육비나 간병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빚을 달기 위해 300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며, “신용 회복이 이뤄지면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함께 ‘탈 성매매 여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이르는 가임기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1인당 월 100만원 양육비 지원 △치매 노인



부양 가정에 1인당 100만 원 지급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전국 유초중고생 무상 아침·저녁 급식 △미성년자 대상 도서관 내 무상급식 △초·중·고·대학생 기숙사 확대 및 관련 분야 은퇴 인력 채용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저출생과 고령화는 분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채 탕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가 이끄는 아리랑당은 현재 약 7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당법상 시도당은 당원 1,000명 이상, 중앙당은 1,000명 이상의 시도당 5곳 이상이 필요해 중앙당 창당은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소식지 제90호 발간

2~3월 의정활동 내용 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21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봄호(제9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416회 임시회와 제417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환영 성명서 발표 등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 회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함께, 탄핵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전복을 견인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포부를 담았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군산항 준설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 건의 활동, 삼십위원회별 현장 활동 등 사진으로 보는 의회를 수록했다.

제·개정된 조례와 건의·결의문도 정리됐다.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4건이며, 건의·결의문의 경우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 등 25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사업 마련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고령층 키오스크 공포 디지털 포용정책 발굴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주제로 기후변화와 작물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도 만들었다.

포토에세이는 화사한 꽃망울을 터트린 전주의 ‘완산철봉 꽃동산’을 담았고, 특별기고는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을 계기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의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불호를 시작으로 2025년 도의회 소식지에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76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의회 태동부터 오늘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해 이르기까지를 다뤄보는 ‘의정 타임머신’과 전북 역사 여행 이야기를 담은 ‘전북 문화유산 답사기’ 등 새로운 기획 코너를 제작해 독자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이만호 기자



전주 글로벌 상권 창출 현장을 찾은 중기부 장관

전주시는 21일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워커퍼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여기업 대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상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전주시는 21일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워커퍼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참여기업 대표,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상권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먹사니즘 정읍 네트워크’ 공식 출범

민주 천명계 원외 조직

제21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진이재명계 원외 조직 ‘먹사니즘 정읍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먹사니즘 정읍 네트워크’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의 정책 비전과 정읍 지역 현안 중심의 ‘이재명 노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네트워크 회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사회화기업 사)들레 안수용 이사장이 대표로 선임됐으며 각 분과, 지역별 대표가 선임됐다. 출범식에는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



진석범 상임대표 이종걸·박성수·김인수 상임고문, 서영교 국회의원 등 중앙네트워크 및 각 지역 대표와 관계자들과 함께 정읍·고창 국회의원인 윤준병 의원,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이상길·황해숙·김석환 정읍시의원 등 시의원들과 시민, 각급 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먹사니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통령 경선 후보가 지난해 중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시한 사회경제발전의 정책 비전 중 하나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

안수용 대표는 “깨어 있는 정읍시민의 조직된 힘이 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오늘 외침이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그 빛은 이제 정읍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취지의 ‘먹사니즘’을 넘어 이제 모든 국민이 잘사는 ‘잘사니즘’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가자”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의안 심사·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대

표발의: 이선덕 의원)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 등 8건, 총 18건의 의안 심사가 이루어진다. 임시회 둘째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

는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 사업’ 현장 등 총 14곳의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점검해 각 부서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북, 말산업 선도지로 ‘질주’

2025년 전국승마대회 25개로 개최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전국 승마대회를 지난해보다 3개 대회가 늘어난 총 25개로 확대 개최하며, 말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역대 최다인 10개 대회가 선정, 총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대회 운영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전국 단위 승마대회가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 35개 대회 중 무려 30%가 전북에 집중된 것으로, 도가 지난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이후 장수 국제승마장 개보수, 익산·완주 공공승마장 신규 조성 등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올해 승마대회는 말산업특구인 장수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도내

다양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승마 가족, 동호회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숙박, 관광, 외식 등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상자에게는 지역 상품권과 전북 특산품이 시상금 및 부상으로 제공되어 지역 내 소비 진작은 물론, 전북 농특산물 홍보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승마대회의 확대는 말산업을 넘어 관광, 농식품, 지역상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중요한 기회”라며, “전북이 명실상부한 말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회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경제 전반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신항, 군산항과 통합 운영이 답”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대책위, 이원택 국회의원 겨냥

“투포트 운영, 정책적 근거 부족... 정치적 주장에 불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일)는 21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원택 국회의원의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과 지역 분열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새만금신항의 국가관리무역항 지정은 이미 사실상 확정됐으며, 현재 논의의 핵심은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하나의 항만(원포트)으로 통합 운영할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주장하는 투포트 운영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며,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별대책위는 국가 항만정책의 기본 원칙이 통합 운영이라며, 부산항·평택·당진항 등 사례를 들어 “효율성과



예산 집적을 위해서라도 원포트 운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개의 무역항이 전북의 위상을 높인다는 주장은 허구”라며,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물류 경쟁력 저하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원회는 “전북은 이제 감정적 논쟁이 아닌, 전략적 통합과 미래지향적 항만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도지사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립길